# PTTT Review

672호 2021.4.30(급)





##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http://www.kfcc.or.kr, 연 락 처: 02-771-7936 주 소: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 Review

## CONTENTS

#### ■ 업계 동향

- ▶ 포스코건설, 이웃사랑 안전지킴이 발대식
- ▶ DL이앤씨,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에 선정
- ▶ 호반건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

####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건설투자 코로나발 하락세 지속
- ▶ 건설사 발행 ESG채권 흥행

##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낙찰 제한 법안 의원 입법발의
- ▶ 수의계약의 원칙적 금지 법안(의원 입법발의) 논란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4.24(토)~2021.4.30(급)>

제672호 2021.4.30(금)

#### <업계 동향>

#### ◈ 포스코건설, 이웃사랑 안전지킴이 발대식

- ○포스코건설이 화재예방 을 위해 지역사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 동에 나설 예정
- 4월29일 포스코건설은 포스코O&M, 포스코 A&C 등 포스코그룹 계 열사, 소방청과 함께 인 천 송도사옥에서 '이웃 사랑 안전지킴이' 발대 식을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과 신열 우 소방청장, 김정수 포 스코O&M 사장, 정훈 포

스코A&C 사장 등이 참석하였음



'이웃사랑 안전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한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신열우 소방청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김정수 포스코O&M사장(왼쪽에서 세번째), 정훈 포스코A&C사장(왼쪽에서 두번째)

- ○올해 9년째인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은 기존 업무 외에 건설 현장 인근 지역의 재해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지역 소방 거점 활동,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키트 지원, 장애 특수학교의 안전 대피로 설치 등 사업범위를 4개로 확대하였음
- ○특히, 포스코그룹의 3개사는 각 사의 장점을 살려 장애특수학교 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설계와 감리는 포스코A&C, 시설물 상태 점검과 위험요소 컨설팅은 포스코O&M, 대상학교 선정과 안전시설물 시공은 포스코건설에서 각각 맡아 상호 시너지를 높일 방침

#### ◈ DL이앤씨,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에 선정

○ 4월289일 DL이앤씨는 글로벌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주관하고 환경부·국회기후변화포럼·국회 ESG포럼이 후원하는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건설업 부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음

○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 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글로벌 비영 리 기관으로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환경 관련 경영정보를 평가 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글로벌 금융투 자기관에 제공하고 있 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96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CDP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

- ○DL이앤씨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목표 및 성과관리, 리스크 관리 등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최고 수준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총 8개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며 국내 건설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 한편, DL이앤씨는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실현과 ESG경영 확대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 호반건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발전기금

- 4월29일 호반건설은 서울 서 초구 우면동 호반파크에서 화 순전남대병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였음
- ○이날 전달식에는 김대헌 호반 건설 기획담당 사장,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 원장, 김영민 화순전남대병원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발 전기금은 화순전남대병원 내 환자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활 용될 예정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과 김대헌 호반건설 기획담당 사장(사진 왼쪽부터)

- ○신명근 원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에 화순전남대병원에 큰 관심과 함께 발전기 금을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암 정복과 미래의료 선도를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은 지난 3월 가톨릭대학교 '옴니버스 파크'건립을 위해 5 억원을 전달하였으며,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에도 발전기금을 전달한 바 있음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4.24(토)~2021.4.30(금)>

제672호 2021.4.30(금)

## <건설경제 일반동향>

#### ◈ 건설투자 코로나발 하락세 지속

○4월27일 한국은행의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경제가 선전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 □ 현황

-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
- 건설투자는 2020년 1분기 4.2% 증가한 이후 2분기 0.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1.0%와 -2.5%로, 감소폭을 확대

<분기별 건설투자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년도	2017				2018				2019 (잠정)				2020 (잠정)				2021 (잠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건설투자	10.7	9.6	6.9	3.1	0.8	-2.6	-9.1	-6.4	-8.1	-3	-2.7	2.6	4.2	-0.1	-1	-2.5	-2.4

- 건설투자 역성장은 건설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해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역대급 폭우, 끊이지 않는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의 후유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
- 아울러 건설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SOC 예산 집행이 좀처럼 속 도를 내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
- 실제 지난 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집행률은 연간계획(51 조9866억원) 대비 13.7%,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의 집행률도 연간계획(4조4756억원)의 8.6%에 그쳐, 공공공사의 신규 발주마저 얼어붙은 탓에 건설투자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 전망

- 건설투자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지만, 올 2분기 들어서는 반등가능성

도 예측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SOC 예산 집행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지난 해 170조원을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설수주가 속속 착공에 들어가면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 한국은행도 올해 건설투자가 상반기 1.2% 감소하고선 하반기 들어 2.6% 늘어나며 올해 0.8%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올 1분기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분기부터는 토목건설이 증가하고, 건물건설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

#### ◈ 건설사 발행 ESG채권 흥행

-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글로벌 경영환경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건설사가 발행하는 ESG 채권이 흥행을 이어가는 있음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낸 데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로 이어졌다는 분석

#### <주요내용>

#### 현황

- 최근 한화건설이 공모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는 모집액의 6.8배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 당초 한화건설은 녹색채권(Green Bond) 500억원, 회사채 300억원 등 총 8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수요가 5440억원에 이르자 발행 규모를 녹색채권 3년 만기물 1200억원, 회사채 2년 만기물 400억원 등 총 1600억원으로 확대
- 한화건설이 발행하는 녹색채권은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ESG 채권 중 하나로 친환경사업 등 사용처가 제한돼 있으며, 모집된 자금은 친환경건축물 건설과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출자금,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친환경운송수단인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에 활용될 예정
- 한화건설은 지난해 5월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전량 미매각을 기록한 적이 있어 이 같은 흥행 기록은 지난해와는 180도 반전된 결과
- 국내 건설사 최초로 녹색채권 공모를 진행했던 SK건설도 최근 수요예측에서 1500 억원 모집에 8배 넘는 1조2100억원이 자금이 몰리자 3000억원 규모로 증액 발행 (조달된 자금은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 건축물 등 신규 프로젝트에 활용 예정)
-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7월 글로벌 금융사인 HSBC와 BNP 파리바스와 함께 2년 만 기 약 1200억원 규모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해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ESG 채권을 발행

- 포스코건설은 지난달에도 14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는데, 당초 ESG 채권 800억원, 회사채 300억원 등 총 1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모집액의 6배가까운 약 6300억원이 몰리면서 ESG 채권 1400억원, 회사채 400억원 등 총 1800억원으로 발행규모를 확대
- 포스코건설은 최근 SC제일은행,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은행과 지난해 수주한 폴란 드 바르샤바 소각로 프로젝트 관련 '선물환' 거래에 ESG 활동 목표를 인센티브 부여 조건으로 추가한 ESG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 국내 기업 최초로 ESG 파생상품 계약에도 성공

#### □ 전망

- 앞으로도 건설사의 ESG 채권 발행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
- 건설업계는 건축 및 주택사업에서의 이익창출력이 견조한 가운데 정부 정책이 건설 사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 현대건설과 DL이앤씨도 ESG 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ESG 및 녹색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기업분할·신설 후 처음 발행하는 공모채를 발행할 예정인 DL이앤씨는 최대 2000억원을 조달해 차입금 상환을 비롯, 각종 운영자금에 활용할 목적으로 ESG채 권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4.24(토)~2021.4.30(금)>

제672호 2021.4.30(금)

##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9일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금번 지침 개정은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

#### <개정안 주요내용>

#### □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 개정 시행령 상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

#### < 변경된 '벌점 경감 기준' 주요 내용 >

구분	경감사유	주요 내용				
	피해구제	피해구제비율 = 자발적 피해구제금액/피해금액 총액 (공정위 시정명령, 법원 판결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제외)				
신설된 사유	—  <b>-</b>     -	- 서면직권실태조사에 따른 경고, 자진시정하여 향후재발 방지명령이 부과된 경우는 피해구제비율에 미포함				
	입찰정보 공개	입찰참가자 중 일부에게 미공개하거나 입찰결과의 일부라 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미공개로 간주				
수정된 사유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의 비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위탁한 경 우 직접지급으로 불인정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하도록 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하여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

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

- 요청 대상기관은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 하여 선정하도록 함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 >

1. 검토대상 사업자 선정 2. 사업자에 사전 통지, 3. 벌점 경감사유  $\Rightarrow$ - 누산벌점 5점 초과 관련 자료 요청 해당여부 판단 사업자 선별 Ţ 6. 처분 후 30일 이내 5. 관계 행정기관에  $\langle \neg$  $\langle \neg$ 4. 위원회 상정 및 심의 이행결과 통보 및 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 개정 시행령에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정위가 시행한 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에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한 경우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 요청대상 조치내역(조치대상 사업자 명단, 조치시점, 구체적인 조치내용 등)을 규정

#### ◈ 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낙찰 제한 법안 의원 입법발의

- ○최근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고려토록 하는 법안(국가·지방계약법, 4.13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과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강화 법안(국가·지방계약법, 4.14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이 잇따라 국회에서 발의됨
-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산재 발생건수 고려법안은 산재 은폐의 우려가 있고, 입찰제한 강화는 건설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과잉입법으로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 낙찰자 결정시, 산업재해 발생건수 정보 등 고려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 국가(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 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

#### □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강화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건에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명시

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에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토록 함

#### ◈ 수의계약의 원칙적 금지 법안(의원 입법발의) 논란

- ○최근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을 처벌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및 '지방계약법'개정안('21.3.24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이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는 현재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계약 체결시, 담당공무원을 수뢰죄로 처벌하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등 간접적인 제재만 가능함에 따라, 직접적인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된 것
-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사정이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수의'라는 뜻에 담긴 부정적인 인식에만 파묻혀 개정안을 발의한 과도한 입법이라는 게 중론이고, 조달청에서도 유찰로 사업이 표류된 대형공사를 신속하게 집행하기위해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 수의계약의 원칙적 금지

- (<u>국가계약법 개정안</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 의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함
- (<u>지방계약법 개정안</u>)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함

#### □ 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수의계약 등은 담당공무원 처벌

- (<u>국가계약법 개정안</u>)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한·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u>지방계약법 개정안</u>)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 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로 해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 수의계약 내용의 공개

- (<u>국가계약법 개정안</u>)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공개하게 함